

‘세종시’ 연말 정국 최대 쟁점으로

세종시 문제가 연말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이 1일 ‘세종시 수정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하며 쟁점화를 본격 시도한 가운데 정운찬 총리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를 둘러싼 갈등이 이 같이 복잡한 구도 속에 전개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전체가 오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권 내부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정계개편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종시 문제에 대해 “여야 합의로 입법이 이뤄지고 그 법이 실행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떻게 백지화를 시키느냐”면서 “방법도 비겁하다. 그 지역 출신을 출신으로 기용해 그 사람의 손을 통해 백지화하겠다는 태도는 비겁하고 치졸하다”고 비판했다.

민주, 충남지역 돌며 단식투쟁 격려 ‘쟁점화’ 본격 시동

여권, 鄭총리 ‘정면돌파’에 親朴계 ‘수정불가’ 정면충돌

정 대표는 이날 박병석, 양승조, 변재일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과 함께 세종시 건설 예정지인 충남 연기를 방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소속 지역위원회를 격려한 뒤 연기군 의회를 들려 지방의회 의원들과 만나 세종시에 대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세종시 수정 행보도 계속되고 있다. 정운찬 총리는 지난달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시를 방문, “주민들이 조금만 참아주면 이곳을 대대손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또 이달 중순께 자문기구인 가

청 ‘세종시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대안 마련 수순을 밟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을 대야(對野) 및 대국민 설득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세종시 문제가 자칫 여권 ‘잠룡(潛龍)’들간 파워게임 양상으로 번질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차기 경쟁이 조기에 점화되면서 세종시 해법 마련은 더욱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 세종시 수정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 총리와 박 전 대표 어느 한 쪽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친이 주류 층이 논란에 본격 가세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꾀이게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대표의 입장에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친박계 한 핵심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와 관련해선 ‘원안 플러스 알파(α)’ 입장을 재차 확인했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된 걸로 본다”면서 “우리(친박)쪽에서 더 이상 다른 말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이 박 전 대표 측의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하면서 여권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세종시 문제가 자칫 여권 ‘잠룡(潛龍)’들간 파워게임 양상으로 번질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차기 경쟁이 조기에 점화되면서 세종시 해법 마련은 더욱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 세종시 수정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 총리와 박 전 대표 어느 한 쪽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친이 주류 층이 논란에 본격 가세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꾀이게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6자회담 우선...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 오바마 1년 한반도 정책은

2008년 11월 4일 버락 오바마가 미국 제 44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지난 1년동안 한반도 정책은 계속 ‘조정’이 이뤄지는 과정을 거쳐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취임 초 적대국과의 ‘비프하고도 직접적인 협상’ 원칙을 밝혀 부시 행정부 초기와는 달리 북미 대화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고위급 대화로까지 발전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을 상반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 2차 핵실험 등의 변수와 맞물리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정책은 부시 행정부 1기와 비교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적극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제재 카드를 부각시키면서 북한의 6자회담 북극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8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억류 여지가 석방을 위한 방북 이후 북한의 ‘유화공세’로 국면이 바뀌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원

칙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6자회담 우선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6자회담을 대체하는 미북대화는 없다”는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노선을 탈피하고 동맹을 중시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인식이 근저에 깔려 있다.

또 북한과의 양자 대화를 배제하지 않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다. 북한이 대화를 하자고 하더라도 대화 자체를 위해 무조건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의 양자협상 요청에 선뜻 응하지 않고 “비핵화를 위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6자회담 북극을 약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것도 이 원칙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제재를 풀거나 완화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과거 클린턴, 부시 행정부 때의 협상·합의·파기로 반복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뒤틀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보상은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폭탄테러 희생자 추모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페샤워르 폭탄테러의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행사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최근 발생한 차량 폭탄테러의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행사에서 촛불을 켜고 있다. 지난달 28일 여성과 어린이들로 가득한 시장에서 폭탄을 실은 차량이 터지면서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이자 있는 트라이슈머 시트방수! 원탁한 단열효과까지!

주제별 특별제작 수제수제

062-511-0444

www.triashopper.co.kr

트라이슈머

www.triashopper.co.kr